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세월호 같은 참사”…고소 예고

작년 3차 강제철거 당시 폭력사태 관련 서정협 시장 직무대행 등 직무유기 고소 경찰도 고소하며 “국민 안전 못 지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회를 상대로 한 지난해 11월 3차 강제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충돌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리 및 중앙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제철거를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2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및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및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과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죄로 서울 중앙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 중앙경찰서장과 중앙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은 당시

오전 1시20분부터 시작돼 약 7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50여명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도 교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고,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당시 상황을 세월호 참사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등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

기했다고 적었다. 종교구역인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존치를 원칙으로 재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중앙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3차 명도집행 당시 벌어진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묵과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여기에 대해 “세월호의 선장’과 같았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재개발조합장 등도 용역업체 등 폭력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면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행위 등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중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당시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수사를 지난 4월 3일 마무리하며, 사랑제일교회 목사

와 신도, 유튜브 등 10여명과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목사와 신도, 유튜브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차별법위반 혐의를, 용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다. 김민정기자



민주노총,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왜 험담해” 지인 흉기 위협한 5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께 광산구 비아동 한 고물상에서 주인 B(55)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물상을 찾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고물상에서 B씨와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26개단체,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반대 추진위 출범

반대추진위 “세계적 관광단지 만든다는 착공식때 약속 지켜야”



전남 여수시청에서 27일 여수수산인협회, 여수YMCA, 여수YWCA, 지역사회연구소 등 여수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도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이 원래의 취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영찬 여수참여연대 상임대표는 “미래에셋이 경도에 약속했던 관광시설 투자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해 10월 변경하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허가에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3월 전남도에 변경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도는 지난 21일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도 생활 숙박시설 건축안에 대해 ‘재검토’의결한 바 있다.

이후 15일 이내인 5월 6일까지 지적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의 교육환경 평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허가 절차가 남았다.

전남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추진을 저지할 목적의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수산인협회, 여수YMCA, 여수YWCA, 지역사회연구소 등 여수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여수시청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입찰문을 통해 “미래에셋이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여수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여수 지역민

은 환영했다”면서 “미래에셋은 약속을 지키고 지역민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경도 사업 착공식에서 인사말 했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게도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착공식 때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에셋 사업안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과 미래에셋이 처음 약속대로 경도를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출범한 범추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안 변경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